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결국 폐기

원안 가결 한달여만에... 책임 공방 일 듯 시의회 재의결 전체 17명 중 14명 반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가 결국 폐기되면서 책임 공방이 일 전망이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광주시가 동의했으나, 이후 시의 재의(再議) 요구, 부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평가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와 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의 눈치를 봤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재의를 요구한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했다. 재적 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4명,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재의결에 실패했다.

집행부가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 즉 재의결된다. 그러나 이날 82%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해당 조례는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지 한 달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민선 6기 들어 조례안 재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9일 상임위, 의장단, 전체 의원 간담회를 거쳐 안건을 상정한 뒤 일반 시민과 복지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 등을 거쳐 이날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조례 폐지를 주장한 사회복지시설측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안전, 노무, 인권 보장은 물론 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전반, 공사·구매 등 계약 업무, 부동산·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의회가 집행부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어서 시장 고유 권한인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찬반 의견도 뜨거웠다. 사회복지시설 측은 “과중하고 중복일 뿐 아니라 시 감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표적감사로 비민주적인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찬성 단체들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는 시의회가 상임위를 거쳐 조례를 제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의회 책임론과 집단민원을 의식한 집행부의 ‘눈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업에 관한 회계 전반, 공사·구매 등 계약 업무, 부동산·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의회가 집행부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어서 시장 고유 권한인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찬반 의견도 뜨거웠다. 사회복지시설 측은 “과중하고 중복일 뿐 아니라 시 감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표적감사로 비민주적인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찬성 단체들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는 시의회가 상임위를 거쳐 조례를 제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의회 책임론과 집단민원을 의식한 집행부의 ‘눈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진·화재 대비 훈련

16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1동 주민센터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지진과 화재상황에 대비해 대피 훈련하고 있다. <북구청 제공>

지방선거 의제, 부정부패 척결·일자리·경제 활성화 順

매니페스토, 10대 핵심의제 공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 본부)는 16일 '6·13 지방선거'에서 다뤄져야 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를 공개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0~11일 19세 이상 성인 1천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수요조사(유무선 임의전화 조사 방식,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꼽은 이가 25.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청년 등 일자리 창출(14.7%),

지역경제 활성화(11.6%), 소득불균형 완화(9.6%),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8.9%)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7.8%), 주거 문제 해결(6.6%),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6.1%), 재난안전 시스템 강화(2.5%), 창의적 인재 양성(2.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17년 19대 대선 의제와 비교해보면 부정부패 척결과 일자리, 소득불균형 완화 등의 선호도가 유사했고 교육·안전자치 관련 의제가 새롭게 핵심의제로 선정됐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공정선거지원단 발족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해 선거범죄와 관련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기존 2200여 명에서 7100여 명으로 늘어나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들은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후보자의 준법선거운동 유도는 물론 가짜뉴스 유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벌이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김보현, 안전한 서구조성 3가지 정책 제시



김보현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사람을 지키는 도시안전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안전한 서구 조성을 위해 3가지 안전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구민 안전 등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훼손 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겠다”면서 “긴기 편한 보행로 구축과 보행로 상시 관리보수팀을 운영해 구민 안전을 위해 보행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재난 취약시설물 및 낡은 시설 등을 전수 조사하여 단계별 교체를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면서 “지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이 일상화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일 “첨단기술·나눔 접목 서구코인 보급”



이성일 민주평화당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첨단기술과 나눔을 접목한 서구코인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원봉사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통화’를 발행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서울시 노원구가 블록체인 기술을 나눔에 접목해 성공한 사례를 주목해야 하며 시장화되지 않은 나눔 분야에 우선 적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에 드는 초기 비용이 낮고 공공성이 높은 자원봉사자, 기부자,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구매자 등의 보상 차원으로 적용한다면 나눔을 손쉽게 하면서도 블록체인의 기술의 현실 적용 가능성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인 “무등산권역 특구 지정 추진”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비롯한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을 받은 것을 45만 북구주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무등산권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세계적으로는 137번째, 국내에서는 제주와 청송군에 이어 세 번째로, 이를 계기로 무등산을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무등산 주상절리, 광주호수생태원, 무등산생태탐방체험관, 환벽당 등 누정문화, 원효사상이 이주단지, 무등산수박 등 북구가 가진 자산가치를 활용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수 “평동산단에 체육·문화복합시설 건립”



장성수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평동산단입지에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평동산단입지 내 옥동 제2 근린공원에 연면적 3000㎡ 규모로 실내체육관, 도서관 및 놀이방 등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단지에 체육·문화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체육과 문화, 근로자와 주민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체육·문화 복합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평동공단 근로자는 물론 구민도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산구 산업단지 민원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송귀근, 고흥읍 선거사무소 개소 본격 선거운동



송귀근 민주평화당 고흥군수 후보는 지난 13일 고흥읍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와 전정배 전 대표, 황주홍·유성열·이상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후보는 “낙후된 고흥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력과 행정경험은 물론이고 인맥이 중요하다”며 “33년 공직생활을 통해 실력과 행정능력, 중앙부처 인맥은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난달 평화당에 영입, 지방자치분권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병동 “깨끗하고 소통하는 장흥 만들것”



박병동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15일 “깨끗하고 소통하는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군수가 되면 마을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해 주민여론을 수렴한 소통의 정책을 만들고, 예산집행때 반드시 수시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능력있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인사공토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부서·근무평정 100% 다면평가제 도입 ▲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실질적 권한 부여 ▲사무관 승진예정자 소신 발표를 통한 면접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박용두 “균형잡힌 지역발전 위해 함께 가자”



박용두 정의당 곡성군수 후보는 지난 13일 곡성읍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특권·반칙 없는 공평한 기회와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위해 저와 군민이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제는 정치적 이해의 목적으로는 더 이상 곡성의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며 “진정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에 대한 긴 인목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보다 나은 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이 가진 차별성으로 힘 있게 운동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고광운 곡성문화원장, 안창순 곡성민주사회연합회장, 이선재 곡성멜론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인환, 선거사무소 개소 선거 운동 돌입



박인환 민주평화당 구례군수 후보는 지난 13일 구례읍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박 후보는 지난 9일 평화당 구례군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박 후보는 이날 “지난 27년은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였다”며 “이제는 지역의 안정과 화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군민을 하나로 아우르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관광산업 활성화, 농촌소득과 복지 향상, 인재 육성과 인구 늘리기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박정욱·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구례=이진택기자 lit@kwangju.co.kr

지금부터 힐링타임
여기는 힐링트레킹!

한걸음 한걸음 다사람의 힘만으로 닦은 17.74km
천년 세월을 품은 달마고도의 봄길이 열립니다

제1회 달마고도 걷기축제
2018. 4. 28(토) 해남 달마산 일원

달마고도 트레킹, 숲속음악회, 부대체험행사

주관 해남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